컬럼 · 〈월간소비자〉 생각하는페이지

조윤미(미래소비자행동 상임대표)

ESG경영 소비자이니셔티브 강화해야

최근 기업의 ESG경영이 중요한 사회적 의제로 다루어지고 있다.

ESG는 **환경(Environmental), 사회(Social), 지배구조(Governance)**의 영문 첫 글자를 조합한 단어로, **기업 경영에서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한 3가지 핵심 요소**로 정의할 수 있다.

과거에는 기업을 평가함에 있어서 '얼마를 투자해서, 얼마를 벌었는가?' 중심으로 '재무적'인 정량 지표가 기준이었다면, 기후변화 등 **최근 기업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증가**하여 '비재무적'인 지표가 기업의 실질적인 가치평가에 있어서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인식이 늘어나면서 이 같은 **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담론의 결과물이 ESG경영으로 대표**되고 있는 것이다.

ESG경영은 막연한 규범적 의미의 사회공헌을 넘어 **글로벌한 규제로 작동**하고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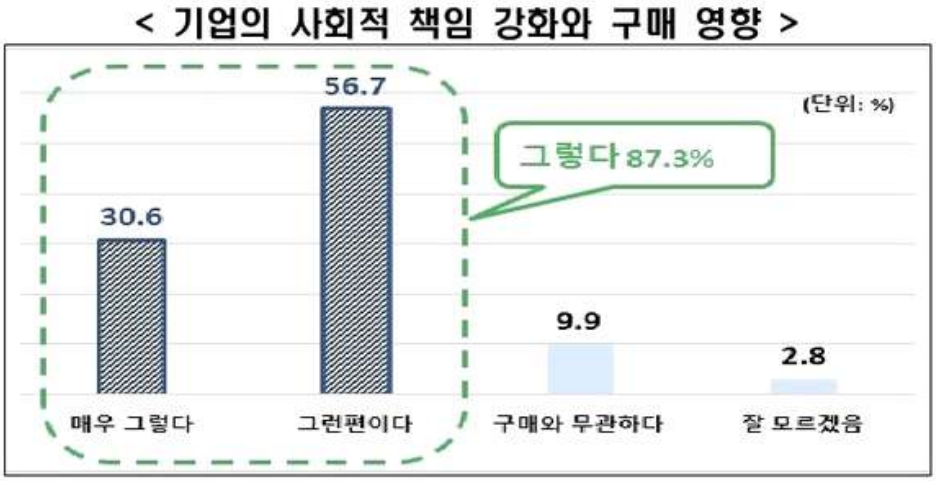
대표적으로 탄소국경세를 들 수 있는데, 지구적인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 세계 250여 개국은 파리기후협약에서 지구의 평균기온을 산업화 대비 1.5℃ 이하 억제하기로 약속한 바 있으며, **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주요국은 탄소배출량을 절감하거나 장기적으로 탄소배출량을 제로화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**하고 있다.

유럽연합(EU, European Union)은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(2019.12발표) 온실가스 감축목표(2030년까지 55%), 탄소국경세 도입, 탄소중립을 위해 연평균 130조 투자 등을 선언한 바 있으며, 미국의 경우에도 2050년 Net Zero달성 목표 (2020.7발표) 에너지전환, 기후변화대응에 4년간 2조달러 투자, 전력부문 탄소배출제로(2035년목표) 친환경자동차산업육성 등을 발표하였다. **탄소국경세 도입은 수출중심 우리 기업의 경쟁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우리에게 ESG경영전략은 이미 필수적인 과제**가 되었다.

또한 자금 이동의 주요기준으로 ESG가 부각됨에 따라 **ESG 정보공개 관련 규제도 속속 도입되고 있다.** 특히 불특정 다수의 투자를 받는 상장기업들의 경우 ESG 정보공개에 대한 압박이 커지고 있으며, 글로벌 ESG 정보공개 정책에 발맞추어 우리 상장기업도 ESG 보고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다. 현재 2025년을 목표로 국내 ESG 보고서 공시 의무화도 추진중에 있다. 주요 신용평가사들도 기업의 신용도 평가에 ESG 경영을 반영하였거나 반영해 나가고 있다. 결과적으로 **기업이 ESG 경영 구축에 소홀할 경우 기업**

가치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 금융비용이 증가하게 되면서 재무적 관점에서도 ESG 경영이 차지하는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.

반면 이같은 기업의 ESG경영으로의 전환과정에 있어 **중요 이해당사자인 소비자참여나 주도성은 너무나 부족한 실정**이다. 전국경제인연합회(전경련)가 지난 4월 12~17일 국민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10일 공개한 '자유시장경제와 기업 역할에 관한 국민인식 조사' 결과를 보면 전체 응답자의 87.3%는 '사회적 책임의 이행 수준이 높은 기업의 제품을 우선 구매하겠다'고 답하고 있다.



[전경련 제공]

소비자들의 관심은 매우 높고 실제 구매행위에 있어 **ESG경영에 적극적인 기업에 대한 선택의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 의한 평가나 소비자가 활용할만한 정보는 턱없이 부족**하다. 글로벌 선도기업들은 이미 96%에 육박하는 기업들이 ESG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파악됨에도 우리나라의 경우, 전체 상장사 수와 비교하여 ESG 보고 수준이 미비한 실정이다. **소비자가 기업을 평가할 만한 제대로된 정보는 부족하고 소비자참여구조도 취약한데 여기저기 ESG경영이라는 이름의 마케팅만 무성한 것이 현실**이다. **지속적이며 신뢰받는 ESG경영체계 구축과 이행을 위해서는 소비자이니셔티브를 강화하고 소비자가 ESG좋은 기업을 제대로 알고 평가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참여구조 개발이 시급**하다.

미래소비자행동
Consumer Action for Future

필자 조윤미
미래소비자행동 상임대표

(consumer@can.or.kr)